다산포럼

김 민 환

언론시장의 지각변동

한때 스포츠신문이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른바 언론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본지보다는 스포츠지를 선호하는 것이 추세를 이루기도 하였다.

스포츠 신문에 대한 평가는 21세기에 스포츠 레저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전문가들마저 스포츠 신문의 인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스포츠 신문은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스포츠 신문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신문사는 스포츠 신문의 적자를 매울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엇이 스포츠 신문을 이 지경으로 내몰았는가? 대자본인가? 아니다. 지하철역에 뿌려놓은 무가지들이 스포츠 신문의 철옹성을 소리 없이 무너뜨렸다.

정권을 뒤흔들며 지금 천하에 위세를 떨치고 있는 메이저 신문도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다.

군소 신문의 경영난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신문 몇 개는 거뜬히 살아남을 것이라고들 내다봤다.

그러나 메이저 신문은 지금 녹록치 않은 경영난과 씨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왜소화를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메이저 신문을 자꾸만 작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정권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메이저 신문은 노무현 정권과 대립 각을 세워 길항(拮抗)하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

장년 이상 보수층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노 정권을 코너로 밀어붙여 놓고 이제 마무리 펀치를 날리려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사기도 오를 만큼 오른 상태다.

그러나 메이저 신문이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있는 동안에 언론시장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핵은 인터넷 신문인가? 하기야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몇 개의 인터넷 신문은 지난 대선에서 메이저신문에 필적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디 그뿐인가? 인터넷 신문은 주로 신문이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가정 자체를 허물었다. 그 가정 하에 신문은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그러나 요즘 소비자들은 사회정보든 상품정보든 신문에서 얻지 않는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터넷 신문이 언론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체인 것은 아니다. 인터넷 신문은 신문이라는 딱지라도 달고 있지만,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런 포탈 미디어가 천정 모르게 그 키를 키우고 있다.

매출 규모에 있어서 유력한 어느 포털 미디어는 내로라하는 메이저 신문의 두 세배에 이른다. 수익률이야 메이저 신문으로서는 게임이 안 된다.

주목할 일은 기존의 신문업자들이 구매력이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비층이 그런 괄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포털 미디어에 엄청난 돈을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는 신문 시장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포털 미디어와 어울려 지내며 거기에 돈을 물 쓰듯이 쏟아 붓는다.

우리 집의 경우 부부가 보는 신문 5종에 월 구독료 6만원을 낼 뿐이지만 20대의 막내딸은 한 포털 미디어에만 그 두 세배를 지출한다.

왜 젊은 층은 신문 대신에 포털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는가?

접근의 용이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컴퓨터의 초기 화면은 으레 포털 미디어 홈페이지다. 메일을 보내거나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하는데, 화면이 뜨면 자연스레 포털 뉴스를 훑어보게 된다.

포털 미디어를 애용하지만 소소한 서비스는 무료여서 부담이 없다.

젊은 층이 기존의 신문시장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을 하나 더 들 수 있다.

정파성이 그것이다.

메이저 신문이 노장년층의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정파성은 단방 약 이상의 효과가 있었지만 젊은층에게 그런 건 다 고리타분할 따름이다. 낡은 정파성이 메이저 신문을 자꾸만 실버타운으로 내쫓고 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 지 현

음식물쓰레기 이젠 감량정책으로

지난 5일 국회 이경재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1만3천28t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해보니 1인당 하루 270g의 음식을 버린다는 것이다.

이경재의원은 "밥 한 공기가 80g, 반찬까지 합할 경우 한 끼 음식이 270g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하루 세 끼 가운데 한 끼를 쓰레기로 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민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309g이라고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보면 음식 준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것이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이다.

또한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혼입되어 버려지고 있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실지로 하루 한 끼에 가까운 음식물을 버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라고 한다.

이런 산술로 보면 우리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경제적 손실가치는 대략 5천억원에 이른다.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임을 감안했을 때, 보이지 않는 환경적 손실가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손실비용이 나오는 셈이다.

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과 9월 광주 5개 구에서 869.1kg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하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45.2%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나, 지자체의 노력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흡수되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낙제점에 가깝지 않나 싶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작 많은 비용을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고 있지만 실지 활용에 있어 만족스런 평가를 받기엔 미비하다.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임에도 이것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가 감량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 배경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마저도 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처리위주의 정책의 변화 없이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치는 해마다 상승해서 발표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장〉

농촌 현실 무시한 축사 제도 농민들 꿈 접게 만든다

몇년 전 귀농하면서 한우 3마리를 키우며 시작했는데, 차츰 늘려서 이제는 제법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다.

최근 한우 농장 우사를 늘리려고 했다가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따라 농촌의 시설물 면적이 60평을 넘을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퇴비시설 60평, 축사 400평 등 모두 460평을 증축하려는데 부담금이 1천800만원 가까이나 되는 것이다. 축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설계비, 건축비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포함하니 새로 증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고 깨끗한 한우를 키우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꿈마저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찰칵! 동물세상

암사자와 숫사자

뜨거운 태양과 끝없는 초원. 사바나에서 사자의 움직임은 느릿느릿 여유롭기만 하다. 물론 사냥할 때는 다르다.

그런데 이 사냥을 암사자가 주도한다면 믿을까. 짝짓기를 위해 숫사자를 선택하는 것도, 새끼들을 데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대부분의 암사자들이다. 숫사자는 따로 떨어져 앉아있다.

그런데 왜 사자 사회는 숫사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숫사자는 오직 경쟁자인 다른 수컷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조직을 차지하고 앞선 수컷의 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린다.

그리고 무리의 두목을 자처하고 가장 먼저 사냥한 먹이를 독차지 한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절대다수의 암컷들은 정말 무던히도 참아낸다.

동물원만 보아도 사람이 다가가면 수컷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 꼭 암컷들 몇몇이 다가와 달려들 듯 덤빈다. 이런, 조직 내에서는 최상의 인내를 바깥에서 최대의 공격성을 들어내는 모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하지만 꼭 모순이라 할 수 없는 게 이 우두머리 수컷은 그 조직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다른 수컷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고 힘이 떨어지면 가차 없이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이 늘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암컷들이 이 수컷의 뒤에서 '굿바이' 하고 인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그러면 진정 누가의 승리일까?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외모지상주의 보단 실력·능력 인정받는 사회됐으면

대학 도서관의 4학년 학생들의 자리에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대비한 문제집들이 쌓여있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인데 4학년 여학생들에겐 이러한 준비 위에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도 취업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다.

수술 일정을 언제 잡는 것이 면접 시험날자에 맞출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취업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을 잡을 것인지,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일정을 만들어야 할 정도다.

방학 때 쌍거풀 수술을 했던 친구의 "나도 취업 해야지"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라니 서글픈 생각도 든다.

얼마전 한 언론의 '빅 위민 패션쇼'에 대한 기사에서 참가 모델이 '개인의 장점을 제쳐두고 외모로 먼저 재단하는 사회에 기죽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외모지상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인정 받는 사회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북 핵실험 단호하되 냉철히 대응해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가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전개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심화돼 결국 파국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립무원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자멸을 앞당길 것이란 얘기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핵 실험 여파가 장기화되거나 군사적 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물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으로 파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어느 때보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안보 문제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민도 안보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감선거 또 과열·혼탁인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운동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마저 이 지경이라니 실망스럽다.

광주시 교육계는 위기상황이다. 학교 납품비리에서 드러나듯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고 '실력 광주'도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여서는 교육계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4년 전 선거에서도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이 판을 치면서 관련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과열·혼탁양상이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혈연과 지연, 학연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향응 및 금품제공, 흑색선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선거에서 '비교육적'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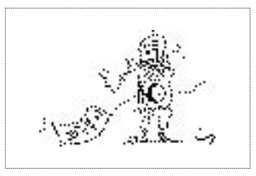
교육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져선 광주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은 전문성과 행정력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광주 교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답게 정정당당해야 한다. 세몰이나 비방, 금품살포, 향응제공에 의지하지 말고 정책대결과 비전 제시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도 자성해야 한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피고 소견발표회에 참석, 후보들의 능력과 품성을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일은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가 또 불법으로 얼룩져선 광주 교육계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입후보자들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위기의 광주교육을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無 等 鼓

패자없는 스포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고의 명문은 단연 뉴욕 양키스다.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조 디마지오 등 미국 야구의 전설적 스타들이 명성을 떨쳤던 팀이다. 현재의 선수 몸값만 해도 2억달러에 달하는 부자 구단이다.

1923년 우승한 이래 지난 2000년까지 월드시리즈 정상에 26번이나 올랐고 리그 우승도 39회에 이른다. 디비전시리즈 우승도 지난해까지 42회에 달해 그야말로 양키스의 역사는 메이저리그 역사 그 자체다.

그런데 올해는 디비전시리즈에서도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패를 당한 뒤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되자 구단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그 파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짐 토리 감독의 경우 벌써 경질설이 나돌고 있다. 언론마다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는 토리 감독이 내년 양키스 유니폼을 계속 입기는 글렀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도 지금 포스트시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가을잔치'에 초대 받지 못한 감독이 옷을 벗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시즌 7위를 한 롯데의 강병철 감독은 내년 시즌에는 진짜 가을잔치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많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지 (구단에서) 쉬라고 하면 푹 쉬게 될지도"라며 성적 부진에 대한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6위를 한 SK의 조범현 감독은 일찌감치 지난 2일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감독은 "우리의 세계는 결국 이겨야 하는 것이다. 최종 성적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지는 것이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핌 베어벡 감독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경기는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승리만 있을 뿐 패자는 없는 냉엄한 현장이 스포츠의 세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성과가 부족하면 도태되는, 적자생존이라는 비인간적 자본주의 세상사를 보는 듯하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